

## 소비자권의 보호를 위한 끼워팔기 규제체계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 -영미법상 위법성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김은수\*

- I. 들어가며
- II.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의 검토
- III. 우리나라의 끼워팔기에 대한 규제와 이론적 체계
- IV. 경쟁제한방지 정책의 제언

## I. 서론

과거 수 세기동안 기업은 자원을 한 곳으로 모으고 리스크를 분산시켰으며, 다양한 성과들이 기업의 이름 아래 만들어지게 되었다. 현재에도 기업들은 각기 다른 문화와 민족 사이에서 상품을 팔기 위해 전세계 어느 곳이든 수요를 찾고 기회를 구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은 더 많은 제품과 서비스를 팔고자 더 큰 시장을 원하고 있으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자 자신의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업자간의 경쟁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개는 거래주체 상호간 지위의 대등성과 입장의 호환성도 보장되지 않는 편이다.<sup>1)</sup> 따라서 소비자가 주권자로서 거래의 상대방이나 가격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끼워팔기(Tying)는 시장 일반을 대상으로 전통적인 경쟁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이며, 결합판매(Bundling)는 통신산업과 같이 과거 독점적인 산업구조에서 경쟁구조로

\* 대구가톨릭대학교 CU인재학부 고위공직자·법학전공 시간강사, 법학박사.

1) 최근 품귀현상을 빚고 있을 정도로 인기 있는 감자칩 종류의 과자가 있다. 일부 편의점이나 중소 유통채널에서 다른 제품과 함께 묶음으로 팔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묶음으로 되어있지만 1개의 제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나머지 제품은 강매나 마찬가지로인 효과가 나타난다. 소비자는 제조 및 유통업체의 끼워팔기에 따라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이다. 인기상품과 비인기상품을 같이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인 끼워팔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는 자신들의 의도한 바가 아니라, 판매점에서 발생하는 개별적 행태라고 주장한다면 공정거래법 제23조의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전환하고 있는 산업에서 경쟁을 형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본고에서 끼워팔기는 특정한 시장에서 지배력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상품간의 판매를 결합하는 것을 규제<sup>2)</sup>하는 대상을 지칭하기로 한다. 끼워팔기에 대한 규제의 발생과정이나 경쟁정책적 의의에 있어서 국가별 규제는 상이하기에, 주로 미국 판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합리적 규제체제를 모색하는 방법으로 국내의 끼워팔기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각각의 규제 법리를 포괄하는 합리적 규제체제에 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II.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의 검토

### 1. 끼워팔기의 법적 개념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동법시행령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호 가목).

끼워팔기를 행하는 동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신상품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상품과 끼워팔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매출실적이 부진한 상품을 시장에서 유력한 상품에 끼워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며, 공급량이 부족한 상품에 남아도는 상품을 끼워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이밖에 경쟁자를 배제하거나 또는 신규참가(또는 參入)를 저지하기 위하여 끼워팔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sup>3)</sup> 일반적으로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자기상품중 시장에서 인기가 좋거나 수요자가 구매를 꼭 원하는 상품을 공급하면서, 경쟁사업자의 상품보다 인기가 낮은 상품을 일정비율로 끼워서 공급하는 형태로 나타난다.<sup>4)</sup>

시장경제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판매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품을 개별적으로 판매할 수도 있고, 여러 상품을 묶어서 패키지로 판매할 수도 있다. 따

2) 본고에서 ‘규제’라는 용어는 경제법이 “국가가 국민경제 전체를 정당하게 질서지우기 위하여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법규범”이라는 경제법 개념 속에서 규제가 갖는 의미, 즉 규율을 세워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경제에 대한 국가간섭’을 뜻하는 것으로 본다. 권오승, 「경제법」 제8판, 2010, 법문사, 58면.

3)